# NCCK, 7월의 시선으로 <불평등의 세대’-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선정

한국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8월의 ‘주목할 시선’으로 이철승 서강대 교수의 저서 ‘불평등의 세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불평등 현상을 선정했다. 이 교수의 책 ‘불평등의 세대’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 묻고 답한다. 386세대가 한국사회의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독점해온 과정과 어떻게 세대 간 불평등을 일으켰는지 분석한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 완성과 불평등의 심화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핵심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정치권력과 기업, 상층 노동시장의 최상층을 차지한 386세대의 독점은 형평성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의 비효율을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386세대의 독점은 상승통로가 막혀버린 다음 세대에게 궁극적 회의를 자아낼 뿐더러 한국사회에 폐해를 양산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86세대가 스스로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약화, 청년세대의 고용확대와 주거권 개선, 연금구조 변경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나눔 전략’이 민주화 투쟁에 이어 역사가 기록할 ‘두 번째 희생’이 될 거라는 조언이다.

이 책은 세대간의 불평등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저자는 올해 한국사회에 세 번째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상한다.

“안전한 거대조직(공무원과 대기업 정규직 직원)에 이미 밥그릇을 확보하고 20~30년의 적당한 근속기간과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에게 금융위기는 하늘이 준 기회다. 이들은 조용히 폭락한 부동산시장의 급매물을 찾아 나설 것이다. 한계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망한 집안의 가장들이 번개탄을 놓고 머리를 싸매기 시작할 때, 이들은 조용히 쾌재를 부르며 정보망을 가동시킨다. 금융위기를 버텨줄 거대조직에 몸담고 있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특히 이제 막 직장을 구하러 학교 문을 나서는 청년들에게 금융위기는 지옥이다. 10여년의 교육투자를 마무리하는 졸업식은 한숨으로 뒤덮이고, 주고받는 꽃다발은 어색한 위로의 말들 속에서 향기를 잃을 것이다.”

언론위원회는 이 책이 제시한 386세대의 책임론에 주목했다.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구현한 이들의 헌신은 무시할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 죽음도 불사하며 독재에 항거한 이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지연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의 공과를 가려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년들이 헬조선을 부르짖고 실업과 비정규직, 결혼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교수는 ‘386세대의 약속위반’에서 찾는다. 정치가 더욱 공정하게 굴러갈 것이란 기대, 시장이 보다 평등한 분배를 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다는 뜻이다.

언론위원회는 이 책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계급이 아닌 세대에서 찾아냈다는 데에도 주목했다.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개념인 ‘불평등과 계급’을 ‘세대’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해냈다는 점이다. 계급은 사회층위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고전적 단위로, 그동안 ‘자본가와

노동자 간 불평등이 갈수록 커진다'는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이 교수는 계급을 세대로 교체해 불평등 요인을 분석했다. 계급을 넘어서 세대라는 새로운 강적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우리사회에서 민주화투쟁을 주도한 세력은 1980년 광주와 1987년 민주화, 1997년 정권교체, 그리고 2016년의 '촛불혁명'을 통해 발전국가가 주도했던 위로부터의 산업화 전략과 권위주의적 통제시스템을 공식적인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일정정도 몰아낸 듯이 보인다. 한국전쟁 및 산업화 세대와 386세대가 여러 번의 충돌을 거듭하여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인 결과, 어느새 한국전쟁 및 산업화 세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386세대가 한국사회 권력구조의 정점에 올라 있다."

386세대의 성공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20대에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이에 힘입어 30대에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다. 외환위기 때문에 바로 윗세대가 사라진 직장에서는 탄탄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40대에 고임금과 부동산으로 빠르게 중산층에 진입했다. 이제 50대에는 자신들만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한국사회를 평정했다. 한마디로 입시와 취업, 주거까지 때맞춰 당첨된 '로또세대'라고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386세대를 키운 요인은 대부분 '노력'이 아닌 '시대'였다.

그렇다면 '좋은 운을 타고 난' '축복받은 세대'가 왜 한국사회를 망가뜨렸느냐 라는 의문이 든다. 이 교수는 한국사회의 권력을 장기 독점해온 386세대가 다음 세대의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386세대가 사회 곳곳에 세력화를 위한 위계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 정당 기업 등 이들이 구축한 네트워크는 문어발에 가깝다. 과잉점유에 의한 '세대 네트워크'의 위계구조는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권력이나 기업, 상층 노동시장의 윗자리를 차지한 이들 때문에 한국사회는 시스템의 비효율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86세대는 국가권력과 대치하고 시민사회 형성을 주도했지만 점차 민주적 선거경쟁 등을 통해 권력을 점유해나갔다. 2016년 총선에서 후보 점유율은 역대 최대인 48%를 기록해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2017년 국내 100대기업 임원 점유율은 70%를 넘어섰다. 시민사회 조직과 대기업 노조간부 점유율, 상층 노동시장 점유율, 최장의 근속연수, 최고수준의 임금과 소득점유율, 최고의 소득상승률, 세대 간 최고의 소득격차 등도 이들이 보유한 타이틀이다.

이들은 30대였던 1996년 총선에서 10명(3%)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40대에 진입한 2004년 총선에선 106명(35%), 50대가 된 2016년 총선에선 161명(54%)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들의 비율이 커진 만큼 다른 연령대의 당선자는 줄었다. 특히 아랫세대가 직격탄을 맞아 지난 총선에서 30대 의원은 2명(1% 미만), 40대 의원은 50명(17%)에 그쳤다.

기업 임원의 연령 분포도 비슷하다. 1998~2017년 국내 100대 기업의 상무이사에서 대표이사까지 연인원 9만3,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반 임원의 8.9%였던 386세대의 비율은 10년만에 60.3%까지 올랐다. 2017년엔 72%에 이른다. 다른 세대는 이루지 못한 기록이다. 소득상승에서도 '더 빨리, 더 많이' 현상이 나타난다. 1990~2016년 가계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잘 드러난다. 같은 44살이더라도 2007년의 1963년생은 15년 전인 1992년의 월 소득(145만원)보다 104만원(71.7%) 오른 249만원을 벌었다. 반면 2016년의 1972년생은 2002년(202만원)보다 43만원(21.3%) 오른 245만원을 벌었다. 386세대의 소득상승 규모와 비율은 다른 세대의 2~3배에 이른다.

386세대의 리더들은 산업화세대로부터 동아시아 벼농사 체제에서 유래한 한국형 위계구조를 물려받았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와 더불어 경쟁이 격화한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위계조직을 유연화한 위계구조로 업그레이드시켰다. 연공에 따른 기존의 위계적 직무분배 체계에 내부자(정규직)와 외부자(비정규직)를 구별하는 차별적 보상체계를 결합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조직이 경기 사이클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386세대라는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가 위계구조의 상층을 장기 독점하면서 유교적 연공 법칙인 '세대교체'의 룰이 무너지고 있다. 또한 세대 네트워크 내부에 속한 상층 리더들과, 거기에 속하지 못한 동 세대 하층 및 다른 세대들 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응집성과 연계성을 가진 세대 네트워크가 국가와 경제, 시민사회의 상층권력을 장악하고, 위계구조와 결합하면서 조직내부 또는 조직 간의 지대추구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불평등은 확대되고 성장률은 낮아진다. 상층 노동시장의 소득과 자산은 나날이 늘어가는 한편, 중하층과 젊은이들은 낮은 소득과 실업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출산을 포기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386세대가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가 공고화한 오늘날, 우리사회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는가. 이 교수는 "어쩌면 더욱 심화된 '불평등 구조'를 가진 사회가 되었다"고 꼬집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심화되었고, 비정규직은 신분화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주기적 상승으로 상층 자산계급과 중하층 자산계급의 격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계층 고착화의 기계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운을 향유했던' 386세대가 어떻게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장악하고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고위직 장악율과 상층노동시장 점유율, 최장의 근속연수, 최고수준의 임금과 소득점유율, 꺾일 줄 모르는 최고의 소득상승률, 세대 간 최고의 격차,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성장이 둔화돼가는 경제에서 가능했을까. 파이는 작아지는데 어떻게 특정세대의 몫은 줄지 않는가. 이 교수는 "386세대의 상층 리더들이 다른 세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더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386세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이다. 386세대의 조직력은 다른 세대의 100배를 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세대 간 불평등과 재생산 구조를 바꾸려면 386세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과 정치권력의 운용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386세대가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첫 번째 희생에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두 번째 희생'을 하라"고 강조했다. "386세대는 다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제하자는 거다. 어차피 386세대를 몰아낼 조직력 있는 다른 세대는 없다. 권력을 가진 386세대가 자식 세대를 생각해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거다."

"386세대는 인구규모가 크고, 잘 조직화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연공제, 노조의 '전투적 경제주의'와 맞물리며 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과를 냈다. 거대한 코호트(인구집단)를 먹여 살리기 위해 기업은 채용인원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뽑았다. 그 결과 청년세대는 얼마 안 되는 정규직을 두고 무한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규직이 너무 잘 싸워서 임금을 올린 폐해가 하층 비정규직과 청년에게 돌아간 것이다. 산업화세대는 386세대에게 완전고용에 가까운 정규직 일자리를 물려줬다. 한데 왜 그들은 자식들에게 질 나쁜 노동시장을 물려주는가."

그는 청년세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 해결책으로 강력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았다.

대기업, 공공부문, 전문직 등에서 시행한 임금피크제로 절약한 인건비로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자는 것이다. 동시에 급여를 직무에 따라 주는 직무급제와 성과에 따라 주는 연봉제를 약한 수준의 연공급제와 함께 시행하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관대한 실업보조금 지급과 재훈련 시스템, 국가 관리 취업 알선기관 등 강력한 고용과 훈련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불평등의 세대'에서 이철승 교수는 '386세대의 약속위반'을 지적하고 세대 간 불평등을 386세대가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도발적 주장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386세대를 일컫는 '샌드위치 세대'란 다른 표현도 있기 때문이다. 신 중년(50~69세)에 들어서는 이들은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중부양과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사회의 최상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앞으로의 생활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 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신 중년의 40.0%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29.7%는 가족부양으로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 이들은 자녀와 부모 세대 부양에 부담을 느끼지만 자신의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실업과 비혼으로 수식되는 청년세대, 기대수명과 빈곤율 증가를 동시에 떠안은 노년세대, 그리고 이들과 한 가족인 신 중년. 이들은 앞과 뒤 또는 위와 아래에 끼인 탓에 하중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386세대를 아직 신 중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세대 구성원들도 신 중년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살아간다. 이교수의 지적처럼 386세대가 한국사회 권력의 최상층부에 군림하면서 자식세대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 것은 사실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도 신 중년에 접어들면서 '샌드위치 세대'로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